" 대형국책사업 지속가능성이다"

NGO에서 GO로 김상희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위원회가변하고있다. 3기 위원회 때 지속위가 국정과제 자문위원회가 되면서정책집행력이강화된데이어4기부터는 관련부처 장관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된다. 관련부처와정책협의가쉬워지는 것은 물론 정책 집행력도 높아질 것이라는기대가나오고있다.

그래서" 소극적인 정책자문 기능에 안주하고있다"는주변의비판을씻을수있을것인지 지속위의 행보에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이런변화의한가운데서있는김상희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0일 세종로정부청사에서만났다.

" 아직까지 지속위에 대한 고민보다 시민운동을 더 고민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 세계화 추세 속에서 시민사회가 맡아야할 독특한공적서비스영역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이 위기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찾아나가는전환기적과정에 놓여있다는것이다.

그는 4기 위원회에서 대형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에대해정책자문을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 세계화 추세 속에서 시민사회가 맡아야할 영역으로 독특한 공적 서비스 영역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정치, 생활 영역에서의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제3섹터가 담당해야 할 공적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밖에못했다. 지금부터는우리사회를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어드보커시 영역과 세계화 속 3섹터가 맡아야할 공적 서비스 영역을 맡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의확대가될수도있고, 정부위탁방식도있고, 자원봉사참여방식, 자조적인방식도있을수있다. 그전환점에있다."

" 어려운 자리, 고민많았다"

- 부임한달을갓넘겼다. 소감은.

▲시민단체와정부는일하는방식이많이 다르다. 시민단체는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 원칙이중요하다면여기서는현실을감안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시민단체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모였고 조직도 작다. 운영방식도발랄하고신속하게결정하고 행동에 옮긴다. 반면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는 점도 다르다. 이런 부분에적응하기위해노력중이다.

-위원장직수락배경은.

▲참여정부 들어서 지속위가 국정과제자문위원회가되면서정책실행력이담보되는 위상을 지니게 됐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정부에서현실적으로쉽게수용되지 않는다. 어려운 자리여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했다. 그런데지속위는다른위원회와달리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시민사회 인사 중 연배와 경력, 전문성등을고려해주변에서나를추천했다. 결국주변에밀려서여기까지왔다.

- 조만간4기지속위가구성된다. 중점활동방향은.

▲국민들은막연하게우리환경이열악하다고알고는있지만, 우리에게그책임이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1인당 에너지 소비가 OECD국가중 13위, 이산화탄소 배출량6위, 물소비 14위다. 더욱 걱정되는것은이추세가활리좋아질것같지 않다는것이다. 산업구조도국민의생활양식도에너지과소비형이다. 특히물, 대기문제등은개인 삶의 소비생활 양식과 밀접한 부분이있다. 국가와개인, 기업이함께노력하지않으면이상황을벗어나기힘들다. 지속위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마련해 차근차근이행하겠다. 거버넌스(민관협치)라는 지속위의 성격을 잘 살려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대형국책사업이계속환경갈등사안으로부각되고있다.

▲4기 위원회에서는 대형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에대해서도 정책자문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하구 환경관리와 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 어떻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도준비중이다. 구체적으로는5대강하구 둑 구조개선 방법과 환경관리 프로그램, 거버넌스구축방향등의내용이담길것이다. 하천 복원 사업은 최근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려한다.

" 갈등조정특위 만들 것"

- 3기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회 운영방식에대한지적이있었다.

▲3기는 전문가와 지역대표 77명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자문과 사회갈등현안에대한배심원기능을함께해왔다. 위원수도 많고, 두 가지 기능이 한 조직에 중첩돼 있다보니3기평가에서지적이많았다. 시행령을개정중이다. 본위원회는관련부처장관과민간위촉정책전문가, 부문별대표등 30명이 참석해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갈등관련 배심원 기능은 지역대표 48명과위촉정책전문가등 70명으로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구성해이원구조로하려한다.

- 관련 장관이 위원으로참석하면지속위 집행력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그렇다. 대통령께 자문을 하면 정책이 수립이 돼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 장관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간 협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자문하는 어젠다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실행을 하는 경우에도 실행력 담보가훨씬수월해지는장점도있다.

- 새만금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형국책과제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볼때 지속위에서의견을밝혀야하는것아닌가.

▲새만금문제는1기때한번정책자문을 한 사항이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갈등이 첨예한 현안과 관련해 자문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냐는 논쟁이 있었다. 1기 때도

관련부처 장관들 당연직 위원 참여 정책집행력 효율성 기대
본위원화 갈등조정특위 이원화 구조로 배심원기능 배가
시민운동 위기 아닌 새로운 운동 찾아나가는 전환기적 과정

논쟁 끝에 결국 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정책자문을했다가대통령이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든 위원이 탈퇴하는 파행을 겪기도했다. 공교롭게도지금은위원구성이 아직 안돼 자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

- 개인으로서는어떻게생각하나.

▲지금은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위원장으로서 지속위가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한번 1기 때 자문한 것을 다시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자문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도 있다. 그것보다는 새만금 문제가 너무 정치적사안으로변해안타깝다. 법정다툼으로 진전이 되면서 국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들어간것도그렇다. 그동안대화가너무 단절되고 너무 극단적이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물꼬를 누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런부분을대법원이할수있다면바람직할것이다.

- 참여정부들어서갈등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이 더 심해졌다는지적도있다. 방폐장부지선정이그예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개혁성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생겨난 환경 갈등들은대개는 십수 년 전에 이미 결정됐다거나오래된갈등들이다. 굉장히정치화돼서 참여정부가 풀기 어려운 숙제들이 된 상태였다.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과정)로서 주민투표도 좋은, 하나의 선택이다. 주민투표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아니라, 주민투표에가기까지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선거과정에서도 개선할 점이 많았다. 결국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프로세스속에서얼마나공정하고민주적으로 하느냐하는것이중요하다.

" 시민운동, 공공서비스로 가라"

-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 시민운동의역할은뭘까.

▲부임한지 이제 한달 밖에 안돼서 사실은지속가능위원회에대한고민보다시민운동을더고민하는사람이다.(웃음) 최근시민운동이위기라고들하지만동의하지않는다. 전환기내지는모색기의위기감과진통이라고생각한다. 2000년대 초까지는 80년대 독재치하에서누적된과제들이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있어야했던 법과 제도들이 그것이다. 예를들어여성운동에는가부장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인 성폭력법, 호주제 폐지 등등이다. 민주화가지체돼 생긴 누적과제를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해냈다. 그 과정에서 정치도많이바뀌고사회민주화도많이됐고, 민주적인사회에서의기본적인것들은갖춰졌다. 지금은거기에서머물것이아니라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나아기 위한 과제들을우리는가지고있다.

- 구체적으로설명해달라.

▲지금세계화추세속에서시민사회가맡아야할영역으로독특한공적서비스영역이 있다. 2000년대초까지는정치, 생활영역에서의민주화의실현을 위해제3섹터가 담당해야 할 공적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밖에 못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드보커시영역과세계화 속3섹터가 맡아야할 공적서비스 영역을맡아야한다. 사회적기업의확대가될수도있고, 정부위탁방식도 있고, 자원봉사 참여 방식, 자조적인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 전환점에 있다. 이 부분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새로운과제에대해서는우리가실력이없다. 누적과제는늘과제로가지고있었던것이어서 할말이있고 내용이있다. 그실력을갖추려니힘든것이다. 새롭게도전해야 하는영역이라시민사회가위기감을느끼고좌절하고 힘들고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

정영일기자 bawu@ngotimes.net
사진=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